

어업의 6차 산업화 전략



손은일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I. 서론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지역발전정책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들이 방향제시에 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부족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특히 국내의 경기침체, 취업불안, 저성장으로 인해 국민은 고단하고 답답한 생활고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 간, 산업 간, 계층 간, 세대 간 다양한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과 충돌이 우려된다.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지역 등의 당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정책의 필요성을 인지, 1, 2, 3차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전략을 수립하고, 도시와 농산어촌 사이의 공존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II. 농어촌산업과 어업의 6차 산업

정권이 교체 될 때마다 주요한 지역발전정책과 더불어 농어촌지역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참여정부에서는 혁신도시정책과 더불어 낙후지역을 위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였고, MB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정책과 시·군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박근혜정부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과 6차 산업이 논의되고 있다.

6차 산업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농어촌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농어촌산업이란 농어촌의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을 말한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농어촌정비법 제72조)하면서 그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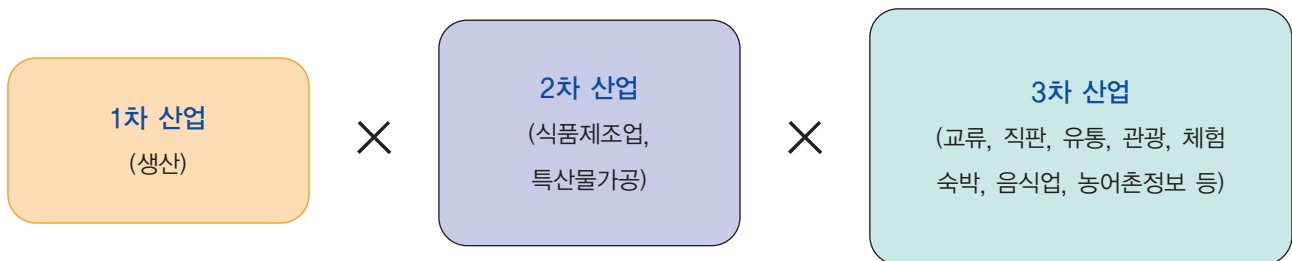


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삶의질향상특별법 제32조)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산업육성 시책을 시행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산업육성기본계획(3년 단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산업관련 정책을 보면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이 있다.

지금까지 추진된 농어촌산업 관련 정책은 고도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즉,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로 농어촌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 어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어업의 6차 산업화 주요 내용으로 6차 산업추진 기반정비, 어촌기업 활성화, 체험관광 활성화, 어업인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 6차 산업 개념과 육성방안

6차 산업화란 농산어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1차 산업)을 바탕으로 농어업과 식품·특산품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 ICT 등(3차 산업)을 융·복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활동)이다.



〈그림 1〉 6차 산업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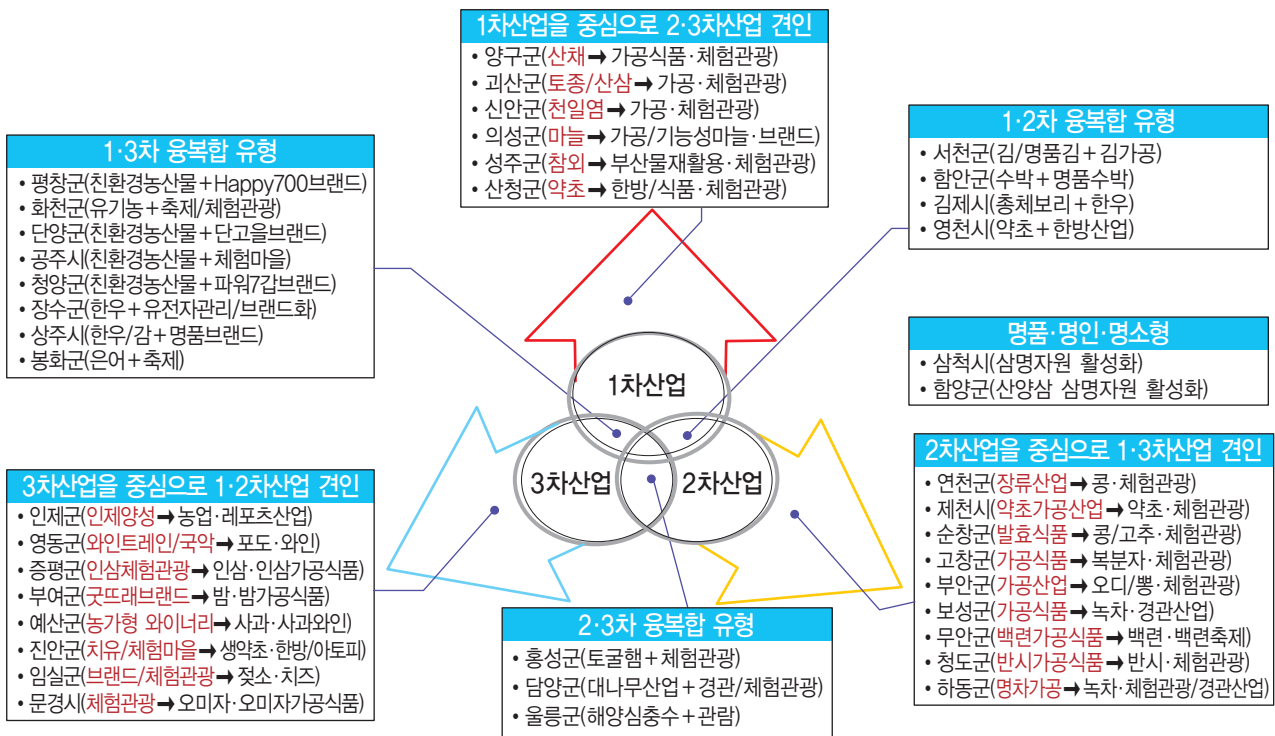
6차 산업화 개념의 보급자로 알려진 일본의 이마무라 나라오미 교수(1988)는 농업이 1차 산업에만 머물지 말고, 2차 산업(농축산물의 가공식품 제조)와 3차 산업(도소매, 정보서비스, 관광 등)에까지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농어촌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일으키고, 고령자나 여성도 새로운 취업 기회를 스스로 창출하는 사업과 활동이며, '1차, 2차, 3차 산업의 유기적·종합적 결합', '1차(농업생산) × 2차(식품가공업) × 3차(유통판매업 등) = 6차 산업화'로 제시하였다. 한국에서는 전국 70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6년간 추진한 신활력사업이 정부가 추진한 공식적인 대규모 6차 산업으로 생각되고, 향토산업육성사업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은 6차 산업은 농어업·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즉 농어업·농어촌의 경제 및 사회적 여건 악화(농수산물개방으로 농어촌경제 어려움 증가, 도농·어 간 및 농·어가 간 소득격차 심화, FTA 등으로 농산물 수입증가 및 가격하락 전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젊은이들의 영농·어업기피, 농어업인구감소와 농어촌인력의 노령화 심화, 취약한 농어촌인력으로 고품질 및 기술 농어업 추진곤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유통기능 취약, 외식중심의 식사문화구조와 값싼 해외농수산물

의 수입과 소비증가 등)를 해결하려고 추진된 것이다. 즉 농어업이 1차 산업에만 머물지 말고, 2차와 3차에 까지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고령자나 여성도 새로운 취업 기회를 스스로 창출하여 농어업·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2. 6차 산업화 유형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추진된 다양한 6차 산업화의 사례는 다양하다. 신활력사업이나 향토산업육성사업 등을 중심으로 농어촌산업에서의 다양한 융·복합 추진사례를 소개한 것이 <그림 2>이다. 6차 산업육성으로 지자체에서의 성공사례도 다양하다. 문경시의 자료를 보면 오미자의 융·복합화로 기능성 상품개발과 오미자 축제 등과 연계하여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2005년 300농가, 40억 원에서 2012년 1,050농가, 895억원)이 22배 증대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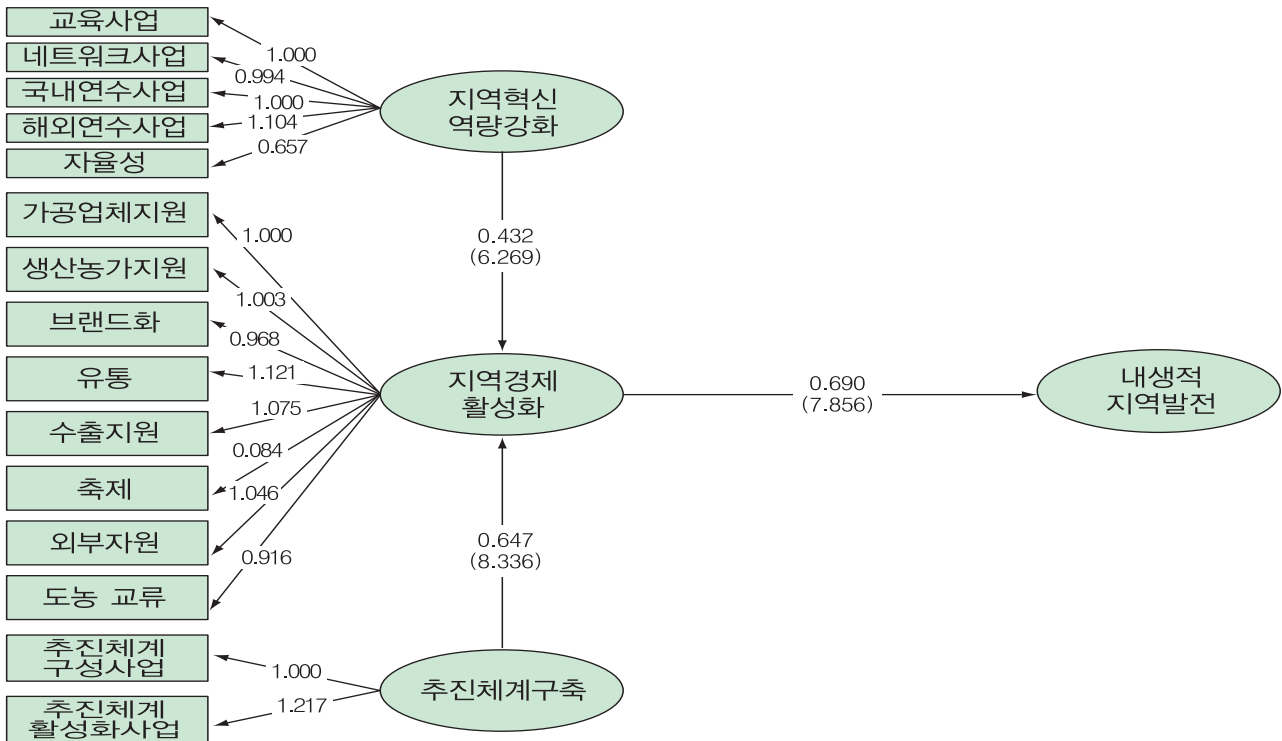
<그림 2> 6차 산업화 융·복합 추진사례

3. 어업의 6차 산업 육성과 추진전략

3.1 어업의 6차 산업육성

6차 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접근관점, 육성정책, 추진체계 등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 어업의 6차 산업을 지역정책적 관점에서 접근 : 산업정책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면 되지만, 농어촌산업정책은 산업정책적 관점과 지역정책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하고, 어업의 6차 산업의 경우는 어업·어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정책적 관점에 무게중심을 더 둘 필요가 있다.



〈그림 3〉 신활력사업 추진모형, 농촌계획(일본), 2013년, 손은일

- ② 해양수산부의 6차 산업 정책 : 어업과 어촌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양수산부는 6차 산업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어업의 6차 산업화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어업의 6차 산업화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③ 어업의 6차 산업 추진체계 : 농어촌지역정책이 지속적인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이고, 지역주민 주도의 사업추진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주도의 농어촌정책 시스템을 자율과 책임원리에 따른 주민주도의 상향식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이기도 하다. 2기 신활력사업을 추진했던 전국의 70개 지자체의 사업참여자(280명)를 대상으로 한 연구(손은일, 일본 농촌계획, 2013년)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85개 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손은일, 한국 농촌계획, 2012년) 결과를 보면, 지역혁신역량강화와 추진체계 구축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어 낸 이후에 내생적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추진시 '순차적인 사업추진체계의 구축'과 '지속가능한 경제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④ 일본 어업 6차 산업 전략과 특성 : 일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어업의 6차 산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맵은 〈그림 4〉와 같다.
- 또한 어업 6차 산업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수산물 수요의 증대 및 수산물 이용의 다양화 - 제조업 등을 통한 2차 산업 및 3차 산업 활성화로 수산물 소비 증대



〈그림 4〉 어업의 6차 산업(일본)

- ㉔ 어업 경영의 안정화 - 어가(魚價)상승 및 서비스화 상품을 통한 소득증대
- ㉕ 과도한 어획방지 - 저이용 및 미이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한 어업 외 추가적 소득 창출로 과거와 같은 과도한 어획방지에 기여
- ㉖ 어촌의 자생적 발전 도모 - 소득증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어촌의 자생력 향상
- ㉗ 신규 시장 개척 - 도어교류 활성화를 통한 도시인 관심도 증가로 시장 개척 용이

3.2 어업의 6차 산업 추진전략

- ① 6차 산업의 경제유발효과 확인 : 어업 6차 산업의 경제유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어촌기업을 중심으로 확인하여야 하나, 현실적인 규모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기업이 차지하는 생산유발 구성비, 부가가치유발 구성비, 취업유발 구성비, 취업유발계수 등을 확인하여 농어촌기업의 현재 위치와 발전방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② 6차 산업 기업(어촌기업, 어촌계 등)의 경쟁력 약화 고리를 파악 : 어업의 6차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먼저 어촌기업 기업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 고리(부가가치와 수익성 악화, 인력부족, 자원과 투자 능력 부족, 기술 및 마케팅 역량 미흡 등)를 파악하고 탈출시켜야 한다.
- ③ 어촌기업의 강소화(強小化) 전략 : 6차 산업은 창조적 산업이고 융·복합 산업이고, 그 융합정도에 따라



팩키지-하이브리드-퓨전 등으로 혹은, 성장단계별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각각에 대한 현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가령, 성장단계별(초보-유망-강소기업)역량강화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어촌기업의 규모나 역량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모듈별 서비스(인력, 금융, 마케팅, 기술개발, 브랜드, 디자인 등)를 위한 체계적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④ 창업과 R&D(기술개발) 체계적 지원 : 창업보육부터 사업화, 어촌기업 컨설팅, R&D 및 마케팅 지원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가공기술센터를 확대하여 적은 투자로 사업아이템 발굴, 기획·경영교육 후 시험생산, 홍보, 사업화 지원 등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를 6차 산업 활성화와 어촌기업육성과 연계하여 창조적인 청년창업과의 시너지 제고가 필요하다. R&D와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지자체 연구소 인프라와 적극적인 협조도 요구된다.
- ⑤ 유통 및 마케팅 지원 : 생산된 6차산업화 제품은 우선적으로 지역 및 인근 도시 판매를 촉진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역순환경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농산물이나 농산물가공품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산업사회 발달로 5일 시장이 소멸되고 있는데, 직장인(특히 맞벌이)을 위해 주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장개설(토요장터, 일요장터 등)이 필요하고, 품목조합의 파트너인 소비조합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소비조합은 생산조합과의 직거래(계약거래, 주문거래)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III. 결 론

‘지방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면서 상생발전 할 때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어업의 6차 산업 활성화로 어가 소득증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해 본다. 